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제156차 농업위원회(CoAg) 회의 참석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3. 출장일정

- 2011. 6. 19.(일)~6.23.(목) (3박 5일),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re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6월 19일(일)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6월 20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2박 2일
6월 21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3박 3일
6월22일(수)~23일(목), 13:30	파리→인천	귀국	3박 5일

4. OECD 제156차 농업위원회(CoAg) 회의 의제목록

의제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논의단계
Item 1	<i>Beyond Doha: a New Paradigm for Measuring Support and Protection in Agriculture</i> ; Committee for Agriculture Policy Forum - 50 th Anniversary of the OECD and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TAD/CA/A(2011)1/ANN1	
Item 2	Adoption of the agenda	TAD/CA/A(2011)1	Decision
Item 3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155 th Session	TAD/CA/M(2010)2	Decision
Item 4	Director's statement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5	Update on G20 work on price volatility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6	Update on horizontal initiatives and the 2011 MCM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7	Activity reports and work in progress		
Item 7.a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Policies and Markets (APM)	TAD/CA/RD(2011)1	Discussion
Item 7.b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 (JWPAT)	TAD/CA/RD(2011)2	Discussion
Item 7.c	The 2011 Global Forum on Agriculture: Update	TAD/CA/RD(2011)3	Discussion
Item 8	Proposed change to the allocation of work between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TAD/CA(2010)16/REV1	Decision
Item 9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poverty reduction and food security; A joint session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AD/CA/A(2011)1/ANN2	
Item 10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Russian Federation	TAD/CA(2011)1	Discussion
Item 11	Other Business		
Item 11.a	Meeting plans 2011	TAD/CA/RD(2010)2/REV1	
Item 12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s Enhanced Engagement strategy: An update	TAD/CA(2010)14/REV1	Decision

6. OECD 제156차 농업위원회(CoAg) 회의결과

□ 핵심요지

- OECD 농업위원회 50주년 기념으로 “농업 생산지 지지 추정치(PSE)”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6월 20일 오전)
 - PSE 개발자인 Tim Josling(스탠포드 대학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PSE 개선과제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 및 회원국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음. “식량안보, 에너지 공급, 농촌지역 발전, 공공재 공급” 등 4개 이슈를 PSE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주요 이슈임.
- 농업·개발 분야 “빈곤 경감, 식량안보 개선”에 대해 농업위원회와 개발원조위원회간 공동세션을 통해 그동안의 작업성과를 공유하고 토론(6월 21일 오전).
 - 농업위에서는 ‘빈곤감소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안보와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 정책’ 연구결과를, 개발원조위에서는 ‘농업, 성장,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개발 원조를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농업발전이 개도국 빈곤 감소 및 식량안보 개선에 중요하며, 기부적 원조보다는 “농업, 개발, 교역, 정부 및 민간부분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업무 중에서 농업개발관련업무인 “세계식량안보, 아프리카 농식품 정책 점검, 개도국 소농의 위험관리” 3개 업무를 농업무역공동작업반으로 이관하자는 사무국 제안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한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은 업무이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식량안보 업무의 농업무역공동작업반 이관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
 - 프랑스에서 농업·개발·무역이슈를 포괄하는 공동작업반 구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사무국 국장은 3개 영역간 공동작업반(그룹) 구성이 쉽지 않은 사안이며 명칭과 멘데이트 등을 검토하여 추후에 다시 제안하겠다고 답변함.
- 한편, 금년 11월 글로벌 농업포럼 준비사항(주제, 의제안 구성방향) 및 G20 농식품 가격 변동보고서 논의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러시아 농업정책에 대한 토론(밀 수출금지조치, 식량자급확대계획이 주요이슈), OECD 관계강화전략 승인 등이 있었음.

□ 관찰 및 평가

- 사무국은 농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PSE 계측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정책요소반영 등을 통해 PSE 대상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농업 생산지 지지 추정치(PSE)” 논의에서 제시된 논거들을 향후 PSE 개선논의 진행과정에서 참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PSE를 농업정책에 의한 시장왜곡으로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 지적내용,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PSE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참고
- 농업위와 개발원조위 공동세션은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정책적 일관성 제고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작업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음.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안보, 빈곤감축 등을 목표로 두 위원회의 협조관계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 산하작업반 업무이관 논의에서 특히 국제식량안보 업무에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이 관찰되었음. 사무국의 추후 제안내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 입장이 유사한 일본·프랑스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 금년 11월 글로벌 농업포럼(GFA) 포럼 참가준비에 있어 금번 논의된 포럼 주제 및 의제안 준비동향, 회원국들의 관심사항 등을 참고하기 바람.

<의제별 주요내용>

□ OECD 농업위원회 50주년 기념 정책포럼

: Beyond Doha: a New Paradigm for Measuring Support and Protection in Agriculture

- 개최배경
 - OECD 농업위원회 50주년을 기념하여 PSE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함.
 - PSE 개발자인 Tim Josling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4인의 패널 및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됨
- Tim Josling (주제발표, 스탠포드 대학 명예교수)
 - 25년전 개발한 양적 지표인 PSE는 각국의 농업 지원과 보호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적 표준이 되었으며, 농업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농업지지의 실제 수준과 정책에 의해 조성된 보호조치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측정하고 있는 PSE와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WTO의 국내보조 측정지표인 AMS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함. 두 지표의 정책적 시사점, 파급효과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DB를 점검하는 등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두 지표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PSE는 최근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이 되어야 하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 문제들과 관련된 농업정책의 영향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함. PSE 개선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슈로는 ① 식량안보, ② 에너지 공급, ③ 농촌지역발전, ④ 공공재의 공급 등임.
 - 식량안보는 식량의 이용가능성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하여 CSE 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
 - 에너지 공급의 경우, 현재의 PSE 체계가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함.
 - 또한 농가(농업인)의 활동을 관련되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 정책효과를 계측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농업정책과 관련된 공공재로는 지역수준에서의 환경, 인프라, R&D 등과 함께 세계수준에서의 온실가스 절감, 교역 등이 있음. 특히 농식품 교역과 관련하여 WTO의 통보시스템은 통보내용의 불일치, 통보지연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관련 규정의 강화가 필요함.
- OECD의 PSE 데이터베이스는 WTO의 허용보조(Green box)와 비교하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현행 PSE 지표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각국의 농업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 Jean Balié (패널, FAO 선임 경제학자, MAFAP 프로젝트 매니저)

- PSE의 개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투명성, 정책점검, 일관성, 개도국에 대한 자료 접근, 포괄적인 적용을 위한 국가간·시점간 조화 및 비교가능성, 공공(지출) 투자 측정,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여 등임.
- 글로벌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임. 특히 식량안보의 경우 식량의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또한, 집계된 지표의 분석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투명성, 정책효과의 상호연계성(소비관련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함.

-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지표들이 적용가능하지 않은 여건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료구축과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Stefan Tangermann (패널, 독일 괴팅엔 대학 명예교수)

- 현재는 정책 자체가 진화하고 있는 동태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지표 역시 진화되어야 함. 특히 바이오연료 및 공공재와 관련된 정책의 진화에 주목해야 함.
- 예를 들어 바이오 연료의 경우 농산물(식량 및 사료)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농산물(바이오 연료용 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 또한 바이오 연료 정책은 자국 생산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내가격뿐만 아니라 국제가격도 상승시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정책들은 국내외 가격차이를 유발시키고 있음. 이런 문제가 지표 개선의 어려움으로 작용함.

○ David Blandford (패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PSE 지표 개발 및 PEM 등 일련의 작업들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책들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
-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재는 광범위한 정책이슈(환경, 소비성향, 바이오 연료, 신흥경제의 성장, 기후변화, 식품, 에너지, 금융시장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성)들이 새롭게 부상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임.
-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PSE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비용효과적으로 획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David Orden (패널, IFPRI의 연구위원)

- WTO의 AMS에 비하여 PSE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지표임.
- DDA에서는 AMS 관련 규정과 국내보조 감축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Box-switching이나 통보지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또한 신흥경제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지원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WTO 측정지표들은 개도국에 적용하는데 있어 단점(많은 융통성 부여, 자료구축의 어려움 등)이 큰 편임.

<회원국 토론요지>

○ 영국

-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과 농업경보시스템을 PSE 체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프랑스

- 공공재 공급과 식량안보 및 에너지안보 등의 개별 정책들은 실제 적용에 있어 상충적인(상반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PSE 지표의 개선은 이러한 상쇄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기후변화와 환경이슈들과 관련된 위험관리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함.
- WTO의 허용보조(Green box)는 사실상 각국이 국내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 PSE는 DDA의 AMS 및 Green box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Tim Josling에 대한 질의)

○ 뉴질랜드

- Tim Josling이 제시한 4가지 정책이슈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
- 바이오연료 지원조치는 시장왜곡적인 정책인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 이러한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그 수준과 이에 대한 대가를 누가(생산자, 소비자, 다른 나라 생산자 등) 얼마나 지불하는지를 과학적·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잘 작동하는 국제시장(well functioning markets)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교역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PSE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캐나다

- Tim Josling이 제기한 4가지 쟁점에서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정책여건에 비관세조치(NTM)와 R&D가 포함되어야 함. 식량안보 및 바이오 에너지 관련 정책의 경우 곡물 및 사료 생산자와 바이오연료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을 계측하여, 해당 정책의 순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일본

- 프랑스가 제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의 정책들이 상충·상쇄효과를 유발할 수 있

다”는 점에 동의함.

- PSE 개념에서 농업정책의 영향을 계측하는 것은 이전수준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를 시장왜곡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문임. 정부의 재정(세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농업정책인데 각국의 농업정책은 국가별 정책수요와 정책목표가 상이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 이를 시장왜곡의 잣대로 삼아 일률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PSE는 생산자로의 이전효과를 계측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PSE와 WTO의 법적인 의무가 따르는 AMS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DDA에서 논의중인 국내보조측정 수단들은 UR 당시와 차이가 있음.

○ EU

- WTO 농업보조의 측정에 있어 투명성(자료출처)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함. WTO 통보 시스템의 개선(통보지연 방지)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임.
- EU는 “PSE의 개념, 시장 및 무역의 왜곡 수준, 시장가격지지 수준(국내외 가격차)” 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의 공급체인을 따라 PSE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 GSSE 지표개선 연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기여하고 있음.

○ 미국

- 현재의 PSE 체계는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발생하는 정책효과를 계측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일정책 접근방식(single narrow)으로 설계되었음. 여러 분야와의 연결문제가 연구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정책수단)를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도록 개선되어야 함.
-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정책수단의 영향 포함)의 효과를 구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바이오 연료, 환경 서비스, 지속가능한 생산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수단들을 PSE와 상충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완적으로 PSE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회원국 토론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

○ Tim Josling (스탠포드 대학 명예교수)

- 영국의 제안처럼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과 농업경보시스템을 PSE 체계와 연계시킬 필요 있음. OECD 회원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며 관련 데이터의 구축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의견대로 WTO의 기존 Green box는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DDA

이후로 PSE는 AMS와, GSSE는 Green box와 각각 대칭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함.

○ Jean Balié (FAO 선임 경제학자, MAFAP 프로젝트 매니저)

- 정책입안자는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이 경우 단기적인 정책효과와 장기적인 정책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함.
- 그 동안 농업지지의 측정지표들은 생산이나 교역에 집중되었음. 소비 측면에서의 왜곡 수준과 피해대상에 대한 고려가 보완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부문간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경우 농지이용에 관한 경쟁, 식량의 이용가능성, 에너지 부문 등이 중요한 정책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개선된 지표가 요구됨

○ Stefan Tangermann (독일 괴팅엔 대학 명예교수)

-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임. 엄밀히 말하면 PSE는 정책의 영향을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임.
-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지수준을 나타내는 PSE 수치는 단지 보조금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것이 아님. 이러한 맥락에서 PSE는 전혀 행태적 (behavioral)이지 않은 통계적 지표임.
- 농업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비탄력적인 반응이며 이는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농산물의 경우 가격의 움직임에 수량의 반응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

○ David Blandford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

- PSE plus가 필요한 시점임. 여기에는 프랑스·일본 등이 제기한 “상충되는 정책간의 순효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포함하며, 스페인과 미국 등이 개진한 “정책들의 부문간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것도 포함됨.
- 바이오연료정책은 농산물 수급 문제를 넘어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 공급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mandate question).
- PSE가 정책의 이전효과를 계측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재의 공급에 따른 외부효과, 즉 시장에 미치는 왜곡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PSE plus가 필요함.

○ David Orden (IFPRI의 연구위원)

- 건강과 환경 관련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NTM과 바이오연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음.
- NTM은 WTO SPS 협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하며, 바이오연료정책도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유도·권고할 수 있도록 PSE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Ken Ash (OECD TAD 국장)

- 일본의 의견과 같이 “PSE는 소득이전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지표로서 WTO의 법적 의무를 전제로 통보되는 지표들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PSE의 대상이 되는 농업관련 정책의 범주를 크게 농업정책과 공공재투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업정책의 목적은 농민소득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공공재투자정책은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소득이전효과를 창출함. 따라서 PSE plus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구축이 필요함.
- PSE를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계측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높은 목표임. 현재 PSE와 GSSE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작업들이 농업위 산하작업반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회 관심사안(horizontal initiatives) 및 각료이사회 등 동향 : 정보제공

- Ken Ash TAD 국장이 2011년 각료이사회에서 논의된 위원회 수평적 관심사항들인 식량안보, 녹색성장전략, 물 관련 현황에 대해 구두보고를 함.
- 금년도 각료이사회에서는 새로운 OECD 개발전략을 승인하였음.
 - 새로운 전략은 빈곤국과 개도국에 대한 단순한 원조를 넘어 “포괄적인 개발과 신흥경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식량안보 문제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금번 개최되는 DAC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
- 농식품시장 가격변동성 보고서는 OECD와 FAO의 주관하에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G20 농업장관회의(6.22-23일 개최)에 제출될 예정임.

- OECD 사무총장은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전략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녹색성장을 금년에 추진할 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였음. 이밖에도 농업위원회와 관련된 수평적 이슈로는 ‘기후변화와 물’이 채택되었음.
 - 녹색성장전략과 관련된 자료(화석연료 등) 수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물은 농업 및 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임.
- Ken 국장은 세 가지 이슈(식량안보, 녹색성장전략, 물)와 관련된 농업위의 향후 계획과 추진중인 연구작업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함.

□ 「2011년도 글로벌 농업포럼」 : 준비사항 정보제공

- 사무국은 2011년 11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인 농업 글로벌포럼(2011 GFA)과 관련하여 준비사항을 보고함.
- 2011년도 주제 : 시장정보와 분석의 개선(Improving market information and analysis)
 - 농산품 공급(재고, 재배, 생산량 예측)에 대한 단기적 정보 개선
 - 시장동향과 정책시나리오 분석의 중기적 평가의 개선
 - 장기적 시장분석에 대한 개선
- 의제와 발표자·토론자를 검토 중이며, 오전 세션에서는 단기적 시장이슈를, 오후 세션에서는 중기적·장기적인 동향 이슈를 다룰 예정임.
- 회원국들은 농산품 가격변화와 변동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바이오 연료 시장, 생산성 증대, 환율 및 금융시장의 변동, 인구 및 소득의 성장 등을 지목하고, 이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 또한 가격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이번 포럼에서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시장위험 관리, 식량문제를 겪고 있는 빈곤국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한편, G20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의 농산물 재고에 관한 정보의 부족, 민간분야 정보의 신뢰도, 선물시장의 포함 여부 등의 문제도 제기됨. 정확한 시장정보의 수집과 변동성 요인에 대한 분석력 향상을 선결과제로 지목함.

□ 농업위 산하작업반간의 업무분장 변경안

- 사무국이 제안한 농정·시장 작업반(APM)과 농업·무역 합동작업반(JWPAT)간의 작업재분배(안)에 대해 논의함.
 - 사무국은 APM에서 JWPAT로 다음 3개 업무를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음.
 - 3.2.2.3.1. Global Food Security
 - 3.2.2.3.3. Monitoring African Food and Agriculture Policies(MAFAP)
 - 3.2.2.3.5. Smallholder Risk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6월 20일, 제1차 토론요지>

- 다수 회원국들은 농업위원회가 향후 개발원조위원회(DAC)와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의제(식량안보 등)들을 JWPAT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함.
 - 식량안보 문제를 신개발 패러다임 틀에서 다루기로 한 MCM의 논의내용과 배치될 수 있음.
 - 하나의 작업영역에 배정한 농업, 개발, 무역 등의 차별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통합·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작업반간 업무 재조정은 이관하는 의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조직이나 전문가 등의 업무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사무국이 제시한 안은 개발관련 업무가 과도하게 JWPAT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함. 보다 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반면, 호주, 뉴질랜드, 네델란드, 캐나다, 칠레 등은 사무국의 제안에 동의함.

- 우리나라는 국제식량안보 업무를 APM에서 JWPAT로 이관하는 것은 의제의 중요도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함. 특히 식량안보 문제는 무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개발원조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공동세션(6월 21일 오전) 논의내용을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6월 21일에 재론하기로 됨.

<6월 21일, 제2차 토론요지>

- 농업·개발·무역이슈를 포괄하는 공동작업반 구성을 검토하자고 프랑스에서 새로 제안하였음.
- 이에 대해 3개 영역간 업무협력문제와 복잡성, 맨데이트 및 예산문제, 작업반간 균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한편, 오스트리아, EU는 업무이관분야에서 “국제식량안보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논의결과 정리발언>

- 사무국 국장은 3개 영역간 공동작업반(그룹) 구성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타 위원회의 수용도 필요), 업무이관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이 유보적인 입장이므로 이슈에 대한 추가검토, 새로운 명칭과 맨데이트 등을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 다시 제안하겠다고 답변함.
- 의장은 현행 PWB에서는 현행 업무분담방식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차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함.

□ 빈곤개선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개발 : 농업위-개발원조위 합동세션

- 농업 개발 및 식량안보, 빈곤감축 등의 이슈들에 대해 농업위원회와 개발원조위원회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함.
- OECD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개도국 및 빈곤국에 대한 단순한 원조 차원을 넘어, 전문가 공유, 상호학습 및 정책교류 등을 통한 포괄적 접근을 선언하였음. 양 위원회의 협조체계 구축은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출발점임.

<사무국의 기존 연구결과 요약발표>

- 농업위원회 분야에서는 “빈곤감소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 “식량안보와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 정책” 연구결과를 발표

- 농업발전 및 생산성 증가는 빈곤층에 도움이 되며(pro-poor),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음(식량안보에 있어 빈곤이 문제임).
 - 국가발전에 따라 농업 자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전단계에 따라 국가별로 우선 순위가 변화하게 됨.
 - 저개발국가에서는 농업의 GDP 및 농민 비중이 높으며 소농(small holder) 위주임. 중국·인도의 경우에도 농민 비중이 높은 편임. 저개발국가에서는 농업지원에서 투입보조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시장기능 강화, 공공재(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enabling environment”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원조위원회 분야에서는 ““농업, 성장, 빈곤”이라는 제목하에 개발원조를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
 - 저개발국가에서 농업은 타분야에 비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GDP 증가가 매우 더딘 편임(적음). 한편, 식품가격이 높고 변동성도 크며, 농업현장에서 농식품이 낭비되는 경향도 큰 것이 특징임.
 - 농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농업소득 외에 농민소득원의 다각화가 중요함.
 - 주요 과제로서, “enabling environment” 조성,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측면에서 교역역량의 제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multi-diciplinary)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조성, G20와의 협력, 국제기구간 협력조정, 원조의 효과성 제고, 국가들의 자원 원조 증대 등을 제시함.
- 농업부분의 성장이 개도국의 빈곤감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빈곤국에 대한 기부적 원조보다는 “농업, 개발, 교역, 정부 및 민간부분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내용

<회원국 토론요지>

- 대다수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안보, 빈곤감축 등을 목표로 두 위원회의 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
- 독일
 - 두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제로 ① 식량안보, ② 가격변동성, ③ 농업시장 정보시스템(AMIS)의 구축과 투명성 제고, ④ 개도국 원조 등을 제안
- 뉴질랜드

- 개도국 식량안보와 농산물가격안정에 있어 국제교역의 중요성 강조

○ 미국

- 국제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개발, 무역, 환경(기후변화) 등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이 적절하며, 이러한 협력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다만 서로 다른 **mandate**를 가지고 있는 양 위원회 및 사무국 내부 상호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려함.
- OECD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와 비회원국들의 참여, 민간부문의 협력 등이 중요한 관건임.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부산 개발원조회의에서 비회원국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핀란드

- 식량안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농업생산(자급)과 무역을 균형있게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함.

○ 벨기에

- 개도국들이 직면하는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해결방안보다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포르투갈

- 농업개발, 식량안보, 빈곤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녹색성장, 재정(세입, 세출, 원조 등)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함. 두 위원회의 공통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적 연계, 주도권(ownership) 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스라엘

- 농업개발, 식량안보, 빈곤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위원회의 협력 작업에서 혁신과 과학적 접근이 중요함.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경우 수확 및 수송단계에서의 식품 낭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정부가 개도국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내 다양한 부처간의 협력 경험을 소개함. 상호학습, 갈등 해소, 의사결정과정, 정책 추진시에 발생한 문제해결 등의 사례를 설명함.

< Ken Ash 무역농업국장의 답변 >

- 개발·농업 간의 정책 일관성 확보는 중요한 관심사이며, 내부·외부·G20 등간의 파트너십 구축 및 정책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농업투자 확대, 자원 확보 등에 있어 민간 분야와의 관계형성 강화가 중요함.
- 反부패, 거버넌스 개선 등 “enabling environment” 조성이 중요하여, OECD는 지표 설정, 정책모니터링 및 분석 등의 역할을 할 것임.

□ 러시아 농업정책 토론

- 사무국은 단기적 생산지원책에서 장기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사무국의 발표에 이어 러시아는 농업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13-2020년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조치의 효과와 정당성(일본, 캐나다 등이 문제제기), 식량자급 확대 정책에 대해 토론이 집중되었음. 러시아는 수출금지조치를 통해 국내가격안정효과가 있었으며(오는 7월 해제예정), 수입의존도가 크고 국제가격변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농업생산 증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함.

<사무국의 발표내용>

- 농업은 GDP의 5%, 고용의 8%를 차지하며, 수입의 16%가 농식품임(특히, 육류와 설탕). 다른 한편으로는 밀 수출국가임.
- 2008-2012년 농업발전계획을 실행중이며, 정책이슈는 농식품 수입의존도 증가, 식품가격 인플레이(최근 약60%) 등임. 식량자급(self-sufficiency) 증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업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PSE는 22%로 증가되었음.
- 밀 수출금지조치가 국내생산유인 감소 및 국제시장 가격변동성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책을 단기적 생산지원책에서 장기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인프라, 공공서비스 구축, 농촌경제 다변화 등)

○ 러시아(Deputy Minister) 발표내용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가뭄피해, 식품가격인플레로 인해 생산지원이 증가하였으며, 밀 수출도 제한했음(금년 7월에 해제할 예정).
- 농촌 교통인프라 투자, 농업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13-2020년 농업발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잠재력이 큰 만큼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토론요지: 수출제한조치, 식량자급문제가 주요 이슈>

○ 일본

- 2010년도 수출제한조치의 실제 효과, 부작용,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

○ 캐나다

-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 및 실제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캐나다는 러시아와 같은 연방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했음.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수적임.

○ 핀란드

- 식량자급에는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무역도 중요하므로 개방된 무역과의 균형이 요구됨.

○ 영국

- 육류는 국제시장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중요성(프랑스, EU), 가뭄 재해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유용성 고려(호주), 농촌개발정책에서 예산 응모와 지원배정의 투명성이 중요(독일), 영농구조개혁방향 질문 등 위주로 발언

○ 러시아(답변요지)

- 수출제한조치는 가뭄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WTO 규정에 따른 것임. 50% 이상 지역이 가뭄 피해를 입었으며, 인도적 수출은 준수하였음. 식품가격 인플레 상황에서 시장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었으며, 오는 7월에 해제할 예정

- 식량자급 확충은 수입이 국내농산물시장의 35%를 차지하고 국제가격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식량안보차원에서 필요함.
- 50% 이상이 소농인 상황에서 대규모 영농조직과 소농간의 수직적 협력강화, 소농의 영농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농업정책과 예산의 투명성 강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재정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65%로 확대할 계획임. 다수의 지원방식을 만들고 이를 지역에서 적합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EU 모델을 참고할 계획임.
- OECD의 정책분석을 높게 평가하며, OECD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함.

□ G20의 농식품 가격변동보고서 논의동향 설명: 프랑스

- 프랑스대표는 보고서 작성 진행경위 및 G20농업장관회의 준비과정을 설명함.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제적 공조강화에 중점을 두어 실행계획을 농업장관회의에서 마련하여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

□ 관계강화전략

- 사무국은 관계강화국과의 관계강화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전략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승인), 관계강화국의 이전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부재, 테스크포스와 비공식검토그룹간의 역할관계 불명확 등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추후 검토할 것을 요청함.